

野,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 與, 김정숙 여사로 '맞불'

법사위, 디올백 수수·주가 조작·공천 개입 관련 증인 채택 의결 국힘,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증인신청 추진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며 관련자들을 국회 증인대에 세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신청으로 대응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으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

장동 개발 의혹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며 YTN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올렸고, 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행정안전부 국감 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민주당의 공세 포인트로 잡히는 가운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

리어 업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 관련 증인도 불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각각 증인 명단에 올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건설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요구하면서 증인 명단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에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한중희 삼성전자 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尹 거부' 6개 법안 모두 부결...야권, 재발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해 국회 본회의의 재의 표결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작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6일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반도체 생태계 조



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제조·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며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을 비수도권 지방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와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재명 "핵개발 도미노 우려...한미 협력관계 중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의 예방을 받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제동·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로 이어져서 동북아 내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미 일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한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과 미국은 특별한 관계다. 예를 들 것 없이,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한국 국민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고, 한미 관계는 그야말로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71년 된 양국 동맹의 뿌리는 한국전쟁의 시련을 통해 맺어진 흔들림 없는 군사

동맹"이라며 "양국 군사동맹은 오늘날 통상·외교 정책·교육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꼽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관계는 향후 이익과 공동가치뿐만 아니라 아주 공고한 인적 관계로 연결돼 있다"며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한 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 등의 공동 가치를 연대하고 있고, 이같은 가치가 위협받으면 수호하려는 의지로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